

세계 주요국가의 기술공무원 선발과정과 활동현황(1)

현대 국제사회는 WTO로 대변되는 무한경쟁과 기술패권의 사회이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력이 국가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건설이 필수적이다. 이렇듯 20세기말 이후 과학기술발전과 이를 체화(體化)한 인적자원(人的資源)확보에 의해 국력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 전반의 이공계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회계급분류전통이 국가전문인력양성의 걸림돌로 이어져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정부(입법, 행정, 사법)조직 내에서조차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이공계 인력활용체계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정부부처 기능 중 상당부분에 과학기술의 전문화·보편화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과학기술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정부인력 관리체계 하에서는 고급과학기술전문인력의 수혈을 통한 정부역량의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19개 부처장관중 이공계 출신은 과기부장관, 정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3명에 불과한데 비하여 미국은 60%이상이 엔지니어출신이고, 중국의 경우에도 주룽지 前총리를 비롯해서 장쩌민이, 후진타오 등 수많은 엔지니어출신의 인사들이 정·관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 널리 진출해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불리한 여건에서는 사회전반에 걸친 성장(成長)의 코어(core)가 과학기술이며 과학기술에 바탕을 두고 사회 각 분야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과학기술리더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과학기술인력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제13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확대방안」을 확정·의결하여 현재 각 부처가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가 이공계인력의 공직진출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자들에 의한 올바른 과학기술정책의 구현은 물론 나아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국민적 과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 이번호와 다음호의 특집기사 주제로 ‘세계주요국가의 기술직공무원의 선발과정 및 활동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정부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가를 고찰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와 독일의 기술직공무원 선발과정 및 활동현황’을 다음과 같은 주제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주요국가에 대한 현황은 다음호에 연속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 (1) 기술직공무원의 선발과정(임용 및 채용)
- (2) 기술직공무원의 현황
- (3) 기술직공무원의 임용체계의 문제점
- (4) 기술직공무원임용체계의 개선방향

이번 기획을 통해 국제화시대 공직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술직공무원선발체계 및 현황을 진단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직공무원선발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이공계 인력활용정책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에 참여해주신 원고집필진 및 본지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